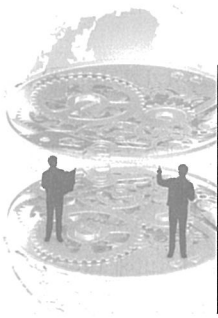


3월 1일부터 비행 중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문의 |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88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3개 항공사가 오는 3월 1일부터 휴대용 전자기기(PED) 사용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 PED(Portable Electronic Devices) : 통신 및 데이터의 처리와 이용이 가능한 경량의 전자기기로 손에 쥐고 사용 가능한 태블릿 PC, 전자책, 스마트폰과 같은 제품에서부터 MP3 플레이어와 전자게임기 같은 소형기기까지 다양
- 그 동안, 휴대전화, 태블릿 PC, 노트북 등 휴대용 전자기기는 고도 10,000ft 이상에서만 사용이 허용되던 것이 비행기 모드로 전환할 경우, 비행 전 구간으로 확대된 것이다.
 - 다만, 휴대용 전자기기를 이용한 음성통화, 데이터 송수신의 경우는 여전히 제한된다고 밝혔다.
-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항법 또는 통신시스템의 전자기기로 인한 전자파 영향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는 동 평가를 수행하였다고 밝혔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4개 저비용항공사(제주, 에어부산, 티웨이, 이스타)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술을 지원하여 오는 3월 15일부터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설비보전기사, 기능사

작업형 실기시험 시행방법 변경사항 안내

문의 | 큐넷 1644-8000

- 금월부터 통합 시행되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및 설비보전기사, 설비보전기능사 종목의 작업형 실기시험 시행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시험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변경
· 작업형(동영상+작업) 실기 시험 당일 동시 시행	· 복합형 종목과 같이 1, 2과제 분리 시행 · 1과제(동영상)는 필답시험과 동일하게 전국적으로 1일 동시 시행, 2과제는 별도일자에 시행

- 1과제(동영상)와 2과제(작업) 시험을 분리하여 별도의 일자에 각각 실시하므로, 수험자는 실기시험 접수 시 각각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1과제(동영상)는 동영상 시험 특성상 전국적으로 1일 동시 시행할 수밖에 없으며, 분리시행에 따라 동영상과제는 수험자에게 응시지역 확대 제공이 가능하고, 2과제(작업)의 경우에도 시험일수 제한 없이 쉽게 접수가 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에너지 절감 생활 속에서 느끼게 된다

수요자 중심의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방안 마련

문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68

■ 앞으로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없이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생활 속에서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3월 13일(목)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 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앞으로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대폭 향상된다.

○ '25년 제로에너지를 목표로 신축 건축물의 단열기준 등을 정부목표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17년부터는 냉·난방 에너지를 90%(09년 대비) 절감하는 주택 설계가 보편화될 전망이다.

○ 여름철 냉방에너지 수요가 많은 업무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사조절장치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냉방에너지 사용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 또한, '16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은 자동차 또는 가전기기처럼 에너지 효율 등급이 매겨져 누구나 쉽게 성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②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한다.

○ 금년부터 노후 건축물을 소유한 건축주는 초기 공사비에 대한 부담없이 창호교체 등을 통하여 성능을 20% 이상 개선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 정부는 이자 지원 및 카드 포인트 제공 등을 통하여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건축기준 완화 등을 통하여 사업성을 높여 자발적 성능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 지자체와 협의하여 노후 단독주거지는 정비사업 등을 통해 냉·난방비 걱정 없는 주택단지로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 이를 위하여 금년 중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노후 주거지에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앞으로 건축물 에너지 정보를 부동산 포털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주택 거래 전에 가격과 함께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된다.

③ 공공 부문에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선도한다.

○ 공공건축물 신축 시 에너지를 적게 쓰는 효율등급 1등급 대상을 확대하고, 에너지 성능이 낮은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성능개선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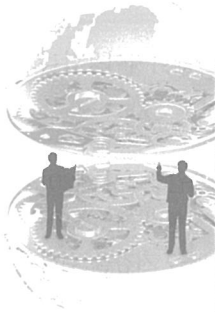
○ 그리고,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는 민간 금융에서 조달하고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장기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④ 부처간 협업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 ◎ 건축물 성능개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지원 체계 및 자재정보 시스템 등을 부처 협업으로 구축하기로 하였다.
- ◎ 앞으로는 공공과 민간 모두 노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 성능개선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성 검토, 컨설팅, 발주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 ('14. 2월 개소)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녹색건축이 활성화 될 경우 14만명의 고용유발 효과 뿐만 아니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걱정없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 아울러, 다가오는 여름철 에너지 위기 극복과 함께 실내 거주 만족도가 향상되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는 등 국민행복에 기여할 것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수 늘리기가 쉬워진다.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세대수 증가 범위 15%까지 확대

문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4

- 앞으로는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15%까지 증가하여도 용적률, 건폐율,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확보,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10%까지만 증가하는 경우에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 ◎ 국토교통부(서승환 장관)은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는 세대수 증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직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 ('12. 12. 24)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 ◎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여부와 세대수 증가 범위 등은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용의 조기 정착과 국민 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설계도서에 도로명주소 표시판 설치계획(크기·위치)을 표기 하여 건축물에 도로명주소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금년 4월 25일 시행 예정이다.